

영산강 다양한 수자원 ‘혼합 조달’ 방식으로 수질 개선

덕흥보에서 강물 취수하고 하수처리수 첨단 상류에 방류
연말 환경부 물순환촉진사업 공모 통한 국비 확보가 관건

영산강의 2등급 수질 달성은 다양한 수자원을 이용하는 ‘혼합 조달’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가 애초 비중을 두고 검토했던 하상여과수(강바닥 모래-자갈층을 거쳐 자연 정화된 물) 개발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하천수 취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조합한 ‘혼합 공급’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장 조사 결과 하상여과수만으로는 목표치를 확보할 수 없어 다각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4일 광주시 ‘영산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광산보-덕흥보 구간에서 하상여과

수로 확보 가능한 물의 양은 하루 1만 7500t에 그쳤다. 영산강 수질을 2등급으로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목표인 하루 10만t에 못미친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지질 조건 때문이다. 땅속으로 물이 흐르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리전도도’가 기본구상 단계 추정치의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바닥 아래 퇴적층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실트)과 점토가 많이 섞여 있어 하상여과수 개발에 불리한 조건임이 확인됐다. 더욱이 하상여과수를 뽑아낼 경우 주변 농경지의 지하수위가 광산지구 0.61m, 덕흥지구 3.06m까지 떨어져 농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광주시는 다양한 공급원을 조합하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하천수와 하수처리수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덕흥보에서 강물을 취수하고 광주제1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물을 첨단 상류에 방류해 하루 8만 5000㎥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혼합 공급 방식의 특징은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다.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되, 가뭄시에는 하천수를 대체 식수원으로 공급한다. 특히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는 여름철이나 오전 10시-오후 6시 등 집축성 친수활동 시간대에는 하천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Y프로젝트의 생태습지 조성과의 연계된다. 신규 생태습지 3곳 11만㎡(산동교 대강공원 인근 4만㎡, 풍영정천 합류부 7700㎡, 광주환경공단 인근 6만 4000㎡)와 친환경 인공생태습지 5곳

13만㎡가 조성되면 수질정화 효과와 함께 시민 휴식공간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기존 습지보전 9곳 40만 8000㎡와 합쳐 총 54만㎡ 규모의 습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자연정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혼합 공급 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환경부 물순환촉진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물순환촉진법에 근거해 혼합방식으로 개발 할 경우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이 가능하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3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12월 중 물순환촉진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내년 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현장 적용 방식과 비용 구조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수층(물을 머금고 있는 암석,토양

층)의 공급능력에 비해 우물(집수정) 용량이 과도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집수정·수평집수관 등 대체 집수 방식과 여과층(자갈·모래) 구성 고도화 같은 엔지니어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류 재충적(인공함양) 방식도 제안됐다.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상류 특정 지점으로 끌어올려 강물에 추가 투입하고, 하상여과·집수설비와 ‘쌍 운영’해 하천유지와 수질 개선을 동시에 노리자는 아이디어다. 보고회에서는 재정 여건도 논의됐다. 정수처리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25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보근 신원력총괄관은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수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영산강을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깨끗한 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허용말아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관행 비판
국회 위증행위 제대로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른 사고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헛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에 더 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이번에도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결국 불필요한 정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없애려면 국무위원이나 각 기관장 등 증인들이 최대한 진솔하게 증언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만 사람을 잡는다면 시장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영터리 수사와 재판을 해서 애만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 중 뭐가 더 나쁜가”라고 고도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트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장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적극 응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 대응과 관련해 현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올해도 요청이 있어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권 효율화 기초 탓에 증원이 거부됐으며,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가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만 213건에 달해 연말에는 400건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요청으로 캄보디아 ODA는 증원하면서도 주재관 증원은 거절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태국·필리핀·베트남처럼 캄보디아에도 한인 대상 범죄 전담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고 증원 문제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방향으로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재정사업·지방세제 감면 우

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 육성과 제주·강원·전북 등 ‘3특’ 특화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심청강기차마을